

전북금융센터 건립도 기금 조성해야

두세훈 도의원, "비용 부족 건립 무산 위기 직면"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사업



비율을 조달하지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두세훈(완주 2) 의원은 "현재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육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 최근 '전북신보의 현금(유동성)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900억원 중 500억원 가량이 부족해 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북도가 증가부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북신보 운영과 소상공인 신용지원에 있어서 증가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세훈 의원이 대안으로 전북도가 기금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은 지난 12일 전북한우협회장과 전북한돈협회장 등 축종대표들을 비롯해, 도내 시료회사 관계자, 도청 축산 및 환경 업무 담당자들과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 첨가 분뇨 배출 전 1차적 저감시켜야

가축분뇨 악취저감 위한 정책간담회서 제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 분뇨의 배출 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물질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12일 전북한우협회장과 전북한돈협회장 등 축종대표들을 비롯해, 도내 사료회사 관계자, 도청 축산 및 환경 업무 담당자들과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공급하는 실험결과가 발표됐다. 실험은 시·군 및 농축산물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돼 김제

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특히,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 축산분뇨 냄새 저감 방법에 새롭게 적용할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황의탁 의원은 " 그동안의 가축분뇨 악취 저감 정책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실험결과를 통해 냄새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섞어 분뇨의 배출 전에 1차 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출향도민 확대방안 찾아라"

문승우 도의원, "고향기부제 대응 미리 준비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이 지난 12일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의 미숙한 출향도민 관리를 질타했다. 문 위원장은 "전북도 출향도민이 35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제 향후 화에 가입된 출향도민의 수는 8천여 명 뿐이라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출향도민과의 소통 및 교류 방식에 있어 SNS를 활용하고 있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정책 자문단은 전북지역 청년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성격의 위원회다.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도내 산단 분양률 저조... 미분양 해결책 마련을"

농산경위 "미착공기업 독려 · 산단 활성화 기업 유치 마련을"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12일 일자리 경제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예코 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과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내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랫동안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미착공기업에 대한 독려와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마련"을 주문했다. 정호은 의원(전주)은 "군산 제1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작년 거의 폐업 수준에 가까운 매출액과 부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제2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은 피하

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북도와 군산시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주영 의원은 의원(전주)은 "전북고 용안산업단지 갑질논란에 대해 질타하며, 조직의 안전성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을 당부하고,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여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흘러가 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성과가 해당 근로자나 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했다.

"회계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한 것"

교육위, 원주교육지원청 횡령사건 관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12일 6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진부서 사안은 전주에슬중·고의 장기화된 재량휴업 문제와 군산 교육문화관에서 3개월간 행해진 감사에 관한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해 해당 사안의 변명할 기회를 위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용구 의원(남원)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회계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낮은 관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전체가 회계부문에 규정과 다른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할 것"을 당부했다.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 중 전주에슬중·고의 장기화된 재량휴업 건에 증인으로는 에슬중·고 교장, 교감이 참석했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처음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는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과거 소유주의 사용승인과는 별개로 소유주가 변경됐음에도 개인 사유지

의 사용을 무상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를 학교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토지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했으며 과거 소유주의 사용 승인을 근거로 내세우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은 "이 문제가 학생문제나 아닌 어른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학생들이 불모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며 "학교 관계자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복위 "내년 축사매입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영석 의원(김제)은 축사분뇨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현황과 관련, 점검대상 개소수가 단기간에 증가한 원인과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김제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 수질개선과 악취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축사매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했으나, 개통한 동서도로로 관련된 문제 등 행정구역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 관련 3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 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발표하고, 새만금행정협의 TF팀을 신설했음에도 반발은 여전한데 전북도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자위 "다문화 사업 특색있게 발굴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12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성경찬 의원(고창)은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다문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의 국비·순도비 사업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우리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개 시·군은 전 분야에 걸쳐 근로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북도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은 "현재 도가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각정당 전북도당과 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중인 정책협의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제주도한달살기처럼 현 시대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타 시도민들에게 전북도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건위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6곳 올 개최실적 전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2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찬욱 의원(전주)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28개 중 6개 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52명의 위원이 위원회 3개에 동시에 위촉되는 등 위원회 간 위원 중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TF팀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은 "도내 지방도 미분양지가 15만평이나 되는데, 미분양지에 대한 한 해 보상액은 불과 1~2억 수준에 불과하는 것에 대해 보상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 공공 시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희생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정책 자문단 위촉

민주 도당 청년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정책 자문단은 전북지역 청년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성격의 위원회다. 도당 청년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해 최영일, 황영석 부의장, 성경찬 원내대표, 김대오 운영위원장,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김철수 농산경계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김희수 교육위원장, 김정수 예결위원장, 이한기 윤리특별위원장, 나인권, 강용구, 두세훈 도의원, 양성민 청년위원회 고문 등 전 현직 도의원들과 이현민 전북 사회정책제언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성환 안전성평가원 박사, 이보욱 익산시청년지원센터장, 황근별 텔로스 대표, 이윤선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시설원예학과 교수, 박길영 인플루언서 등 총 30명의 청년정책 자문단을 위촉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위촉식 격려사를 통해 "청년이 직접 고민하며 만든 지방조례가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자문단을 통해 발굴, 실현될 것"을 기대했다. 이정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정책 자문단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더 나아가 자문단을 통해 발굴된 청년정책이 전북을 넘어 대안 공약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나기학 도의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추가 구축 절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은 지난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북도 내 선상 집하장 설치하는 7곳 뿐인데,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은 편만 아니라, 현재의 해양오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군산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선상집하장에 대한 수요조사한 결과 20곳이 설치를 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여기에 부안이나 고창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현장에서는 약 50여 개소의 선상집하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일년에 2~3개 정도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수요와 행정의 공급량에 너무나 큰 괴리가 발생하는 점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이병도 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안전시설 설치"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3)이 장애인 이동권의 미흡한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로 지정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전북도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은 물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민이리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 시책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